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배포) 2018. 1. 29(월)

**1월 30일(화) 09:00(국무회의 직후) 이후 사용**

**\*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종료시까지 부처 포함하여 모두에게 비공개입니다.  
엠바고 준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

과장 김용수, 사무관 김진한·이상준  
(044-200-2469·2476)

## 43개 중앙행정기관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기재·과기정통·산업·복지·고용·국토부,  
[차관급] 관세·조달·통계·경찰·산림·특허청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1.30(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 \* 국정과제50 + 일자리창출20 + 규제개혁10 + 정책소통10 + 국민만족도10
  - \*\* 가감점 :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하였으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9)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정과제 부문

- **적폐청산·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개정 지연,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 (우수기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 직제순, 이하동일)

## ② 일자리창출 부문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하였고
  -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연가 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 (우수기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 ③ 규제개혁 부문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신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 \* 배기량 등 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를 추가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행정조사 현황을 전수 점검하여 대폭 정비하는 등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산림청, 특허청

#### ④ 정책소통 부문

- 정부출범 초기에 온라인 소통 강화\* 등 적극적·체계적 정책소통 노력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 인지도 조사결과('17.12) : 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

-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 ⑤ 국민만족도 부문

- 주거·의료·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지진 예방·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 남북관계·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수기관) 법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18년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43개(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부문 · 방법

- (평가부문)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타(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 등 9개 부문 평가
- (평가방법) 정량(부문 주관기관) · 정성평가(평가지원단) 병행을 통해 참여와 개방의 국정철학 구현 및 평가의 객관성 · 전문성 · 공정성 제고

평가부문	배점	세부항목	주관기관	평가지원단
국정과제	50	정책추진노력, 성과지표달성도, 정책효과(혁신관리 및 협업 가감점 ±2)	국조실	437명
일자리 창출	20	일자리 과제 추진 노력 및 성과 등	국조실	40명
규제개혁	10	규제개선, 규제개혁체감도 등	국조실	27명
정책소통	10	국정과제 국민소통 활동 · 성과 등	문체부	21명
국민만족도	10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국조실	* 일반국민 18,250명 대상
기타	±10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국조실 등	12명(갈등관리)

□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원단에 대한 22회의 추진실적 설명회(11~12월), 9개 부문별 평가결과 수합 후 평가결과 도출
- 기관종합 · 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분리하여 등급(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산출

## □ 국정과제 부문

## 【 주요성과 】

- 국정농단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등 적폐 청산 · 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국정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운영
- 공익 신고대상 확대(건강 · 안전 · 환경 등 5대 분야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사회혁신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발족

- 일자리 추경 ·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대응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등 '22년까지 81만개 일자리 창출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예산 : ('16) 1.1조원, ('17) 1.26조원, → ('22) 2.52조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 ·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

- 모든 치료목적 비급여 의료항목 건강보험 적용 및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수준으로 확대
-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1:1 맞춤형 관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 (청년) 세어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고령자)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호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자치분권로드맵을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추진 등 균형발전 기반 마련

- 자치분권 로드맵(안) :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 등 5대 전략·30개 핵심과제 선정
- 도시재생 뉴딜 : 기존의 대규모 철거·정비 사업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환경 개선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노후 주거지 정비, 구도심 활력 거점 조성 등)

- 한미동맹·국제사회 공조 강화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및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외교관계 다변화

- 한미동맹, UN안보리 결의(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압박 강화
- 베를린 선언·UN 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 G20 등 다자외교 및 양자 간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외교지평 확대

**【 보완필요 】**

-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 미흡
- 다부처 관련 분야에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하거나 부처간 협업 미흡 사례 발생
-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충족 미흡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보통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	식약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 □ 일자리 창출 부문

### 【 주요성과 】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

- '18년 노동시장정책 재정투자 1.3조 확대,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도 개선, 정책금융 공급, 정부입찰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일자리 통계 신규개발

-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17년 안전복지분야 공무원 10,090명 확충, '18년 예산안에 국가직 공무원 9,475명, 공공기관 8,500명 확충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연차별 계획 수립 및 '17년 6만9천명 전환결정

-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확충 지원**

- 신규 벤처펀드 4.4조원 조성, ICT·SW육성으로 '17년 1.7만명 고용효과 예상
- 영업자 신청제 도입 등 푸드트럭 창업기반 강화
- '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구직촉진수당 지원
- 중상이자 취업지원특례제도 도입, 취업맞춤형 특기병 제도 활성화

### 【 보완필요 】

-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다소 부족**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일자리창출 중점	인프라·여건 개선 중점	
우수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보통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방통위, 공정위	법제처, 국세청,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미흡	해수부	외교부	소방청, 원안위

## □ 규제개혁 부문

### 【 주요성과 】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 추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 신산업 발전 기반 구축

▪ (기존)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 열거 → (개선)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하여 차종 구분 유연화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확대 : 현행 29개 비행가능공역에 더해 김제·고령 지역 추가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 이후 처음으로 행정조사를 전수(608건) 점검, 대폭(175건) 정비,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부담 해소

### 【 보완필요 】

-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규제등록 누락 등 부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재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미흡	교육부, 여가부, 금융위	병무청, 소방청

## □ 정책소통 부문

### 【 주요성과 】

- 출범초기 적극적·체계적 정책소통 활동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제고
  - \* 인지도 조사결과('17.12) : 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
-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소통협의체(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 운영, 유기적인 협업 소통 활성화
- 온라인 소통\* 강화로 대국민 직접소통·쌍방향 소통 활성화
  - \* 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 【 보완필요 】

-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에서의 직접 소통 등 다각적 소통노력이 다소 미흡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과기정통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보훈처	법제처, 방사청, 소방청, 해경청

## □ 국민만족도 부문

### 【 주요성과 】

- 주거·의료·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지진 예방·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

### 【 보완필요 】

- 남북관계·방위산업·공공조달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법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원안위
미흡	과기정통부, 통일부, 해수부, 금융위	인사처, 조달청, 방사청, 새만금청

□ 기타 부문(±10점)

구 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현안관리 (±3점)	우수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복지부	방사청, 소방청
갈등관리 (±3점)	우수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조달청, 경찰청, 농진청, 새만금청
	보통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해양수산부,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법제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미흡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소방청, 원안위
인권개선 (±2점)	우수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인사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행복청
	보통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특허청, 새만금청, 해경청
	미흡	중기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방사청,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
특정시책 (±2점)	우수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보건처, 방통위, 공정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문화재청, 농진청
	보통	과기정통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식약처,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미흡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3****기관종합 평가결과**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타 부문 점수 합산

구분	장관급 기관 (※ 직제순)	차관급 기관 (※ 직제순)
우수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4****평가결과 후속조치**

- 부문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18.2월)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18.3월)
- 「201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18.3월)